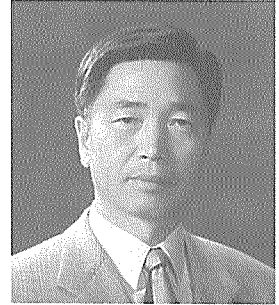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유 종 근
대통령 경제고문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가 많지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따라서 우리 경제를 보다 튼튼한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만 잡아놓으면 된다. 이것을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병행해서 발전시킨다는 표현으로 기본 철학을 말씀하셨다. 민주주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경제만 받아들여 경제발전을 하려던 나라들이 결국 나중에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 독일이나 일본은 전쟁으로 치달아 종말을 맞게 되었고 중남미의 모든 독재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다가 엄청난 빚더미에 앉고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스스로 손들고 나와 民政移讓을 하게 되었다. 이제 민주주의를 하게 되니까 중남미 경제가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독일과 일본도 2차 대전 이후에 비로소 민주주의를 하게 되어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현상을 보더라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뿔레야 뿔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치중되고 한쪽이 무시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사회체제가 붕괴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오게 된 것에 대해 정경유착이나 재벌의 방만한 운영 등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비민주적 관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을 지탱시켜 준 기둥은 관치금융이다.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주인인 주주들을 위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져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도 주주들을 위해 경영하지 않고 1인 독재체제로 경영되어 오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 철학이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경제 운영은 어떤 원칙에 입각한 것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책임경영이고, 둘째는 공정한 경쟁, 그리고 셋째는 공정한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이다.

먼저 책임경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해 보기로 하자. 흔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할 때 책임정치라고 말한다. 어떤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일정기간 동안 국가를 경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나는 이것도 책임경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결국 정치라는 것도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다. 국가 경영권을 선거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고 그 기간동안의 실적에 대해 다음선거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경영권을 재위임 받거나 아니면 경영권을 빼앗겨 다른 경영진 즉 다른 정당으로 넘겨진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민주주의를 기본 철학적인 면에서 보면 '국민이 주인이 된다. 혹은 백성을 주인과 같이 섬긴다'는 뜻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다. 동양에서도 "민심이 천심이다."는 사상이 있었다. 이것은 유교 정치철학의 기본 틀에서 보았을 때 과거 중국에서 왕을 천자라고 부른 것이 하늘의 뜻을 인간세상에서 펼쳐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 때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 곧 민심이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철학이 있었다. 심지어 맹자는 폭정을 일삼는 군주는 백성의 이름으로 몰아내도 좋다고까지 얘기했다. 결국 그것이 책임정치를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고 서양에서 정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기본철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내는 일을 먼저하지 못했던 탓이다. 우리는 유교 정치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나와 천하를 평온하게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수양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인간 사회에서 그러한 성군이란 몇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다.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는가?

서양 사람들은 좀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견제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그 견제장치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주기적인 선거이다. 주기적 선거를 통해 국가 경영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경영을 했는지 못했는지 심판을 받고 만약에 잘못했다면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적어도 잘못하면 경영권을 빼앗긴다는 압력을 항상 줌으로써 경영을 잘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제도를 해방 후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제도만 받아들였지 그 기본정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을 잘못해도 잘못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경영진을 교체시키는 주인노릇을 하지 못한 것이다. 선거권이 있으면 뭘 하는가? 돈 받고 팔아 넘기고 공작정치에 넘어가고 해서 50년 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그 경영진을 다시 신임해 주고 해서 그 경영진으로 하여금 국민을 우습게 알게 만든 것이 전부였다. 그래놓고서 이제야 겨우 아슬아슬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다. 나라를 망친 자들을 다시 재 신임해 줄 뻔했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도 나라를 이 정도로 망친 경영진을 재 신임해 주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5년 후에 만약 우리 국민회의가 국가 경영을 잘못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영을 잘못해 교체된 정당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 새로 국가 경영을 맡게 될 정당도 잘못하면 엄준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이나 금융기관의 경영도 꼭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가? 적어도 공개된 기업은 주인이 주주들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재벌그룹들을 보면 실제 재벌 총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마치 모든 계열사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일인독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주주들이 전혀 주인의식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피땀흘려 번 돈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을 하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빗더미에 올라앉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가만히 있기만 한다.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가 주식 시장의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박이지 투자가 아니다. 물론 주주들이 주주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제약해 온 정권도 잘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해 놓고 항의 한번 해 보지 못한 주주들의 책임도 큰 것이다. 요즘 상호지급보증을 높여라.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라는 등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최근에 금감원에서 자기 자본의 200%로 낮추라는 말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책임경영을 제대로 해 왔다면 저절로 기업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앞으로 책임 경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저절로 기업 내부에서 해결될 것이다.

가령 내가 기업의 총수이고 여러분이 주주라고 해 보자. 지금까지는 총수인 내 마음대로 해 왔지만 이제 주주 여러분이 투자한 돈만큼 충분한 수익을 올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또 왜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가 하고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할 것이다.

또 만일 내가 계열사 A보고 계열사 B에게 지급보증을 해 주라고 한다면 A의 주주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 지금은 총수가 계열사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개별 계열사의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낸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

을 것이다. 그래서 주주들이 역할을 다 한다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재벌 총수가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 수익성과는 상관없이 문어발 식으로 마구 기업을 확장하는 것도 총수가 일인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낸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수익성 없는 사업에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는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금융기관도 주주들의 소유이다. 그런데 80년대 초에 금융기관을 민영화 한다고 해서 국가소유주식을 민간에 팔아 넘겼다. 그런데 말만 민영화였지 실체는 관영화였다. 그래서 우리가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을 한다. 제대로 민영화를 한다고 하면 금융기관의 경영도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투자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올려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책임경영이다. 금융기관의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하게 되면 대출에 있어서도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대출을 안 하게 되고 또 대출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경영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못한다고 하면 자금을 회수한다거나 신규자금을 더 이상 빌려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압력을 넣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경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대통령께서 은행을 통해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금융기관이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과연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해 왔는가? 이제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탈바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책임경영을 정착시켜 왔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기업들이 빗더미에 앉아서 부실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 온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청와대에

서 은행장을 다 임명해 왔다. 그럼에도 주주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온 것이다. 지난번에 제일은행, 서울은행에 대해 주식소각을 하라고 하니 주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항의를 했지만 핑계가 안 된다. 왜 목소리를 안 내는가 말이다. 자기 마음대로 경영 못한다면 팔아버리지 왜 주식을 가지고 있는가 말이다. 이렇게 금융기관의 경영진을 청와대에서 임명하고 이사 선임에도 정치권에서 개입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은 정치권의 압력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망할 게 뻔한 기업인 한보에 5조7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대출되고 그걸 반대한 은행장은 사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모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었던 것이다.

작년 11월에 외환위기를 맞아 IMF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는데 이 외환위기는 표면상 나타난 증상에 불과하지 원인은 아니다.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부실화, 지나친 부채,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영부실화에 원인이 있다.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이러한 내재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다시 한번 외국 투자자들이 점검해 보는 계기를 제공해 준 것이다.

동남아에서 막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한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게 되고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한국이 걸으로 발표한 것과는 달리 속으로는 완전히 부실화 되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니 자꾸 자금을 빼가고 신규대출을 안 해 주기 시작해서 외환위기가 오게 된 것이다.

근본원인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에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주주들을 위한 책임경영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가지 재벌구조 개혁 요구도 하고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

주들의 권한도 강화시키고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권한도 입법화시키고 있다. 재벌의 구조개혁은 근본적으로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정부가 재벌에게 구조조정 개혁안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왕이면 스스로 알아서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렇게 빨리 해 주리라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새 정부가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고 평가를 한다. 과거에 공권력에 의존해 강제로 시키는 모습과 비교하면 약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강제로 시켜도 실제로는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다른 손으로는 받을 것을 다 받아먹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걸으로 보면 굉장히 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부에서부터 개혁을 일으켜 전체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든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시장의 힘이란 공권력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주주들의 의식부터 개혁시키고 나아가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 책임경영을 정착시켜 나가겠다.

책임경영을 정착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방편은 적대적 M&A이다. 이 적대적 M&A가 왜 발생하는가 하면 기업경영이 잘못되면 수익률이 낮으니까 결국 주식이 제값을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싼 값에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한 후 경영진을 교체하고 다시 경영을 개선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주식값을 높여서 계속 경영을 하든가 아니면 시세 차익을 챙기고 팔아버리든가 하는 목적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을 제대로 잘해서 주식이 제값을 받을 때에는 적대적 M&A를 하지 못한다. 이 적대적 M&A란 것은 경영을 잘못했을 때 주식시세가 떨어지면 누군가 이것을 싸게 인수해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영진은 언제 어떤 사람이 회사를 장악할 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그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잘못하면 교체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적대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허용이 안되었는데 이번 IMF사태와 관련하여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합법화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외채 협상을 하느라 외국을 다녀 온 사이 이것을 합법화를 시키기는 했는데 거기다가 주식을 3분의 1이상 인수를 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넣었냐고 따졌더니 그 조항을 넣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적대적 M&A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니 경영진도 자기 방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럴 듯 하기는 한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영을 잘 하면 적대적 M&A를 시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영진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영을 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 3자가 3분의 1 이상을 인수하려고 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으라고 해 놓으면 경영을 아무리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인수하려고 할 때 이사회가 승인을 안해 주면 그만이다. 결국 이것은 법적으로 적대적 M&A를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다.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또 속임수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처음부터 법개정이나 하지 말지 법을 개정해서 허용해 놓고는 뒤로는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평판만 나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앞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책임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정착되어야 한

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는 체제이다. 경쟁을 배제하면 그 안에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좋을 뿐이다. 장기적으로 보아 경쟁을 배제하고 혼자 독점하는 사람도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 경쟁을 배제해서 망한 경우가 있지 않은가? 공산주의 국가들이다. 경쟁이 없으니까 결국 다 망하지 않았는가? 아담 스미스 이후 모든 경제학자들이 경쟁이 있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경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하고 그 룰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 감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룰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응분의 벌칙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는 공정경쟁에 관한 룰이 있기는 했지만 룰 자체가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룰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중소기업을 짓밟았고 정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대기업 편을 들어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 대기업 자신에게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최근 10여년 동안 급격하게 저하되었는데 그 원인은 경쟁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트'라는 교수가 8~9년 전에 <제국가의 경쟁력 우위>라는 제목으로 베스트 셀러를 내었다. 세계 여러나라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것인데 결론은 간단하다. 국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는 국제 시장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일본의 자동차 업계를 들 수 있다. 일본은 미국에 비해 국내 시장이 훨씬 협소하다. 70년대 미국에 비해 소득 수준

도 낮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시장에서 일본은 자동차 회사를 아홉 개나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70~80년대까지 네 개의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세 개다. 일본에 비해 국내 시장이 다섯 배 이상 큰 미국이 자동차 회사를 네 개밖에 안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보다 좋은 자동차를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이다.

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다보니 80년대 이후에는 일본이 가장 싸고 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된 것이다. 경쟁의 묘미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각종 인허가 제도를 만들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몇몇 대기업들에게 경쟁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주 그럴 듯 하다. 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이다. 과잉투자를 하든 말든, 망하고 안 망하고는 회사 마음이고 회사 사정이다. 왜 정부가 나서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가 말이다. 그랬더니 누군가 나에게 ‘그러면 삼성이 자동차를 시작한 게 잘했던 말이나?’하고 물었다. 삼성이 자동차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시장이 판단할 문제이다. 삼성이 자기 책임 하에서 자기가 하겠다는데 왜 하라 말라 하는가 말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허가를 내주면서 공장부지를 갯벌에 정해주는 조건을 달았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고 경쟁을 제한하면 할수록 우리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그만큼 저하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잘되는 것이 있으면 대기업들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뛰어들어 집어삼키거나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 경쟁을 할 때에만 경쟁력이 길러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진입 퇴출 장벽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여러가지 규제를 없애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시장개방을 놓고 마치 큰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아온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30여년 동안 수출은 애국이고 수입품 소비는 비애국적 행동으로 매도당해 왔다. 그러니 요즘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하니 아직도 한국은 외국 상품 불매 운동을 하는 나라라고 기피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수출만 하고 수입을 억제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겠는가? 30년대에 세계 대공황이 있을 때 선진 각국들이 “beggar my neighbor”라는 정책을 썼다. 이웃 나라들이 거지가 되건 말건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해왔던 정책이다.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가능한 적게 하자는 것이다. 그랬더니 전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안 사주면서 우리 물건만 팔겠다는 게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시장을 개방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지 해서 잘 살 수 있다면 또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세계 모든 나라가 수출만 하고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수출도 안되는 것이다. 거래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모르고 수출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러면 남들도 그러한다. 똑 같이 그러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더불어 잘 사는 제도이다.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면 다같이 못 사는 제도이다. 그것을 세계 대공황이라는 값비싼 경험을 통해 터득을 한 것이다. 이후에 자유무역 제도를 미국이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우리가 보기에 미국은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회가 행정부를 엄청나게 견제한다. 의회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무역을 하다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수입품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보호무역을 주장하게 된다. 의회에는 항상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 그런 주장을 무조건 묵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더 강한 울가미로 뒤집어씌우는데 그것이 GATT를 대신하는 WTO체제이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해 나가고 전 세계가 같이 잘 살자는 것이다. 우리는 WTO가 미국이 자기국가 이익을 위해 전 세계 시장개방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시장개방을 하자는 것은 더불어 잘 살자는 점도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국가 경쟁력이 배양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경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과감하게 시장개방을 하자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먹느냐 먹히느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2차 대전 이전에는 이런 생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화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강대국끼리 서로 식민지 확보경쟁을 하다가 세계대전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식민지가 처음에는 좋을 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짐만 된다. 그래서 2차 대전이후에 탈 식민지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게다가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게 승전국들이 가혹하게 전쟁 배상금을 물렸다. 전쟁에서 패망한 독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결실을 전쟁 배상금으로 내 주게 되니까 불만이 팽배해

고 불만이 커지니까 선동정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히틀러가 집권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 셈이다. 2차 대전의 요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래서 2차 대전이후에는 전쟁 배상금을 물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마셜플랜을 만들어 패전국가들에게 피해를 복구하도록 원조를 해 주었다. 패전국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원조해 준 까닭이 너희가 잘 살아야 우리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도와준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2차 대전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쟁의 낙오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경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낙오자들을 원천봉쇄하려고 했다. 기업이 종업원들의 생계 안정을 무조건 책임지도록 만들었다. 회사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반면 그 동안 평생고용제라도 해서 미화되었다. 이게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이다. 우리의 옛말에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가난 구제는 국가도 못한다고 체념을 하고 살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가난 구제를 못하는 나라는 나라 구실을 못하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들을 일컬어 제3세계 국가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고통스런 개혁을 하고 있지만 엄중한 OECD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가난 구제를 나라가 하지 못하고 기업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있었다. 이제는 이 책임을 기업에게서 벗겨 주고 국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기업에게서 벗겨 주고 국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기업에게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고 거기서 희생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대선 때 기업 경영이 안되어 노동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을 개선해야겠다고 하니 해고 없이 임금을 줄여 받으면 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걸 기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이 결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이 해야 한다.

그걸 못하게 하다가 결국 회사가 망하면 두 명 해고함으로써 여덟 명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열명 전부가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입장에서 두 명만 보호해 주면 될 일을 열명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이런 부당한 책임을 지게 하지 말고 이제 그 책임을 사회

가 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이제까지는 이런 책임을 기업에게 지어 왔지만 이제 IMF개혁 과정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의 책임을 국가가 진다고 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했다. 생존 경쟁에서 낙오하고 떨어지는 사람을 안전망을 쳐서 받쳐 주기로 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업자 보험이나 생계보장 실업자의 재훈련, 고용정보 활용 등등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공정한 경쟁, 책임 경영,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에 대해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원칙들에 의해 앞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광 고 모 집

동위원소회보는 년 4회(3, 6, 9, 12월) 발간하는 계간지로서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 등과 관련한 국내외 최신정보를 주내용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사용하는 일반산업체, 비파괴업체, 판매업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과 동분야 관계자를 비롯,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광고를 희망하는 기관은

협회 정보관리팀(담당: 최윤석, 전화: 02-566-10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게재료>

구 분	표 3	표 4	내 지
금 액	1,200,000원	1,500,000원	1,000,000원
비 고	컬러 인쇄(부가세, 원색분해비 별도)		2도 인쇄(부가세 별도)